

중학생이 교사 불법촬영·합성

경찰, 무단 촬영·딥페이크 영상 제작 혐의 10대 입건
현장체험학습서 발각... 이후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
피해자 다수 추정... 제주교사노조 피해자 보호 촉구

제주의 한 중학생이 여성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합성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현재 피해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 방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

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장체험 당시 A군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내 교원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정 교사가 아닌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측은 A군의 불법 촬영을 인지한 직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학교 행사와 교무실 앞, 출근길,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

상 다수가 발견됐다.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합성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교사, 여학생을 촬영한 자료도 확인됐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제주교사노조는 “촬영이 이뤄진 시점과 장소, 그 자료가 선별·편집된 방식은 이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었음을 보여 준다”며 조속히 피해자를 확인하고 이미 확인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경찰 신고와 함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여부 등을 심의할 지역교육보호위원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시교육지원청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피해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A군과의 즉시 분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김지은·양유리기자



소라 금채기 후 첫 작업 1일 제주시 도두동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금채기 해제 후 첫 소라 채취를 마치고 물으로 나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수능 최종 점검’ 9월 모의평가 실시

오늘 도내 36개 시험장서
제주 수험생 6789명 응시

오는 11월에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종 점검하는 9월 모의평가가 2일 치러진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도내 36개 시험장에서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도내 응시자는 모두 6789명이다.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5747명, 졸업생·검정고시생 1042명 등이다. 이들 수험생은 모평을 통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보

완하게 된다. 새로운 문제 유형과 난이도에 적응하며 수능 대비 전략을 세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을 처리한 뒤 성적통지표와 성적일람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29일 응시 신청을 접수한 학교 또는 학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말다툼 끝에 흥기 휘둘러
경찰, 20대 외국인 구속

동료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의 한 양식장 숙소에서 동료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술을 마신 채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유리기자

“애월포레스트 주민설명회 형식에 그쳐”
제주환경운동연합, 1일 규탄 성명

최근 열린 애월 포레스트 공청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맹탕이었던 애월포레스트 공청회, 제주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 중산간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단체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오수 처리수의 방류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계획이 포함됐다”며 “용수공급 계획도 제주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중산간 지역 해발 300m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산간 개발기준을 확정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주도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사항이 여럿이지만 이날 공청회에선 정작 답변 당사자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본 계획의 핵심 논란 중 하나인 용수공급 계획과 관련해 환경적 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본 개발계획의 인허가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시 도심 곳곳 불법 유통광고물로 ‘몸살’

수거보상제 운영... 7월 기준 542명 참여 156만장 수거
경쟁 심화 주택분양시장, 음식점·대부업 광고 등 많아

제주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부착되는 불법 유통광고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분양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분양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 학원, 대부업 등의 영업 전단지과 명함형 광고물도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면서 생활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한 광고 차단과 계도 활

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생활권 곳곳의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말 기준, 542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156만장을 수거했고 이에 따른 수거보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은 제주시 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인건비 지원 외근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대상은 홍보전단, 명함형 광고지, 불법 대부 광고물 등 불법

유통광고물과 전신주·가로등 등에 부착된 벽보다.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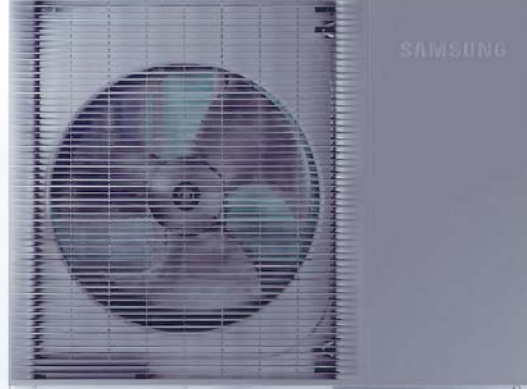
☎ 1544 - 4295

삼성전자 제품

SAMSUNG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